안철수 신당, '호남 맹주' 민주 넘어서는 '태풍의 눈' 될까

지방선거의 해 | 이슈&변수

치고 나오는 安신당에 민주 지지율 하락

■ 안철수 신당 파괴력은

참신·비전있는 인물 영입이 최우선 과제

■ 야권 단체장 후보 경선 룰은

당원 권리·경선룰 혁신 아직은 미흡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대치정국에 시간 부족…유지 가능성도

■ 민주 독점 구도 깨지나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 창당 여부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각 정당의 경선 규칙 등 앞으로도 많은 변수가 남아 있어 지방선거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기에 '安 신당'이 지방선거 이전 창당될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경쟁구도를 깨트릴 '제3대안 세력'으로 기대되면서 민주당의 텃밭이자, 야권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트릴 수 있을 것인지, 신당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 독점 구도 깨지나**=올 지방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안철수 세력 또는 '안철수 신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줄곧 수성 해온 호남의 민주당 독점 체제를 깨트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동안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의 독점 체제가 지속해 왔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일부 무소속 자치단체장 6~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서 압승했다.

이에 따라 역대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무소속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돌풍'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등장이 호남에서의 일당 독점 체제를 유지해왔던 민주당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언론사들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에서의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의 '안철수 신당'행을 위한 민주당 탈당 사태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측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인물 영입과 관련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어 향후 신당 위력이 커지면 일부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탈당 러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 측도 호남을 세력화의 중심기반으로 여기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安 신당 파괴력은**=아직 실체도 없는 '安 신당'에 대한 호남지역민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 올해 지방선거에서 파괴력을 가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安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호남에서 일당 독점을 유지해온 민주당의 정권 창출 실패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정국 이슈를 속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로 인한 계파 간 갈등 등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반(反)민주당 정서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그동안 줄곧 이어온 독점 정당 구조에 대한 피로감도 '安 신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安 신당'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깰 수 있는 '파괴력'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호남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미래 비전과 참신한 인재를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내세울 수 있느냐는 점 때문이다.

현재까지 '신당'행을 택하거나 선호를 하고 있는 인사들 대부분이 민주당 당적을 가졌었거나 민주당을 탈당한 정치인들이다. 일부 전문가 그룹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올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누구나 상관없이 새 정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사들에 대해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태 정치인 또는 함량미달 인사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에 기대여 '새 옷'만을 입고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안철수 신당에 가겠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탈출구'를 찾기 위해 신당행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 측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 민심이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당' 측은 무작정 세력 늘리기만이 아닌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참신한 인물과 비전을 갖춘 인사들의 영입을 첫 번째 풀어야 할 현안과제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인물을 지방선거에 내놓지 못하고, 민주당의 기득권을 깨지 못한다면 '안철수 신당'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던 지역민의 새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키워 오히려 지지기반 약화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선 규칙은**=민주당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일반국민 50%, 대의원 및 당원 50% 비율로 실시키로 하고 예비 경선제(컷오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회가 보고한 시·도지사 후보자 경선 방법 중 제1안이었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50%, 여론조사), 전국대의원(10%), 권리당원(30%) 일반당원(10%)' 방식의 경선안을 선택했다.

혁신위가 대안으로 추가 제시했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30%), 전국대의원(20%), 권리당원(30%) 일반당원(20%)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40%), 전국대의원(20%), 권리당원(30%) 일반당원(10%) 등 두 가지 경선 방안은 제외한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보고하고 당무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경선 룰은 '당원에게 권리를 돌려주겠다'는 애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을 뿐 아니라, 애초 폐지하기로 했던 예비경선제(컷오프)도 도입하기로 해 사실상 경선 룰에 대한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安 신당'도 지방선거 이전 창당될 경우 '경선 룰'이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 측 일부 관계자들은 가급적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해왔다. 따라서 신당을 조급하게 창당하더라도 경선 룰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선거구별로 벌써 '신당' 후보를 자처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넘쳐나고 있어 향후 '安 신당' 측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공천 폐지 어떻게 되나**=올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는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이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뤄지면서 여야는 뒤늦게 지난해 12월3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했다. 이후 단 두 차례 회의를 했고, 같은 달 20일 전체회의에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일정을 의결했다.

이어 특위는 같은 달 27일 지방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고, 오는 7일에는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 교환은 빨라야 이달 중순, 늦으면 이달 말 이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정리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총 24건의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이처럼 향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은 지난해 6월 '2014 지방선거 기획단 발족식'을 갖고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승리를 통한 민주당 부활'을 강조하며 지방선거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최근 광주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 설명회를 열고 호남 세몰이에 나섰다. 안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 박호군·윤장현·김효석·이계안 공동위원장(사진 왼쪽부터)과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